

“행정통합 주민 삶과 밀접… 자치구 역할 중요”

강기정 시장-5개구청장, 현장 중심 행정통합 공감
기초자치 기능·권한 존중…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개 자치구와 현장 중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광주시는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5개 자치구 구청장 간담회’를 열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고광완 행정부시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이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통합되는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추진 경과와 향후 로드맵을 설명

하고, 통합을 통해 기대되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행정통합이 지역 소멸과 성장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선택임을 확인하고,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광역 경제·행정권으로 묶어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초 자치의 기능과 권한을 존중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토론과 소통을 통해 시도민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앞으로 자치구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현장 중심의



13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들이 광주·전남 대통령 성공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한 뒤 두손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여론수렴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행정통합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

점으로, 성패는 결국 시민들의 지지에 달려 있다”며 “주민들이 통합의 필요성과 혜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의견 수렴

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며 “앞으로도 구청장님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합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방정부 권한 대폭 확대해야”

신정훈·문인, 시도통합 타운홀미팅서 자치권 강화 주장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신정훈 국회의원과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새로오픈광주포럼은 광주시의회 1층 로비에서 ‘광주·전남 시도통합, 시도민과 함께 길을 묻다!’란 주제로 제1회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결정에 발맞춰 통합의 방향과 속도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과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기초 발제에 나선 신정훈 의원은 “광주

·전남 행정통합은 단순 행정구역의 조정 이 아닌 자치분권의 심화 발전과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특별자치정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 이후 정부의 위상과 법적 모델은 서울특별시와 준하는 특별자치단체가 되어 한다는 점에서 광주·전남과 중앙정부 모두 큰 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명칭은 특별시 수준이지만 내용은 제주특별법을 뛰어넘는 진정한 특별자치정부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 추진 절차와 관련해 신 의원은 “통합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시도민이다”며 “6·3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보다 의회 의결

을 통해 최종 확정하는 게 현실적이다”고 언급했다.

문 청장은 기초 발제에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영남권에 비해 호남권이 더 기울어진 상태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자치권과 입법권, 재정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가 필요하다”며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임기 초반에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내년 6월 통합자치단체장이 선출돼 시도민을 아우르고 대통령과 함께 가는 선진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개토론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

장과 최형식 전 담양군수,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가 참여해 행정통합 추진 일정과 단계별 과제, 행정 효율성과 재정 구조 개편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등의 방식이 현실적일 수는 있지만, 의회가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특별법 제정과 행정통합 완성 단계에서도 시도민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전했다.

최형식 전 담양군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진정한 의미는 대한민국이 분권 국가로 전환되는 데 있다”며 “광주·전남이 이를 선도한다는 관점에서 연방제 수준의 권한과 자치입법권, 재정 배분 체계를 특별법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형배 의원, 저서 ‘길은 있다’ 출판기념회

18일 조선대 e스포츠경기장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울)이 저서 ‘길은 있다’ 출판기념회를 오는 18일 오후 3시 조선대학교 e스포츠경기장(해오름관)에서 연다.

이 책은 ‘젊은 기업가 7인에게 듣는 광주의 내일’을 주제로, 지역에서 활동 중인 혁신 기업가들의 현장 사례를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의 가능성을 탐색한 책이다.

‘길은 있다’에 등장하는 기업은 인트플로우(AI 확산), 아토모스(글로벌광고), 유아시스(디지털식품), 지니소프트(게임개발), 에스오에스랩(RiDAR 기술), 라이트미(패션물), 넥스트고(떡 제조·유통) 등이다.

직접 인터뷰에 나선 민 의원은 지역 산업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혁신사례를 분석한 뒤 ‘상상-전환-창조-확장’이라는 개념 틀을 제시하며, 지역산업이 처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실천적 경로를 제안한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광주에는 길이 없다는 말이 익숙하지만, 이미 길을 만들 어가고 있는 사람과 기업, 시스템이 존재



한다”고 진단하며, 수도권 중심의 성장 담론을 넘어지역내부에 형성되고있는 변화의동력을조명한다.

이어 에필로그에서는 개별 성공 사례를 넘어 “이 같은 흐름이 정책과 제도, 문화로 정착할 때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로 확장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민 의원은 13년간 신문기자로 활동한 뒤 시민사회와 학계, 행정부를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으며, 이후 국회의원으로서 검찰개혁과 자치·사회정책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이번 저서는 ‘자치가 진보다’, ‘광주의 권력’, ‘탈당의 정치’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저작이다. 출판기념회에는 책에 소개된 기업 대표들이 직접 나와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민 의원은 주요 내용과 산업 정책의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도,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 결집’ 시동

1000명 참여… 범도민 결의대회 열고 통합 필요성 공유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도민 공감대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민 참여형 공개 행사를 통해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공유하며,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한 소통 폭도 넓히는 모습이다.

전남도는 13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도민 의견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민간·사회단체 대표와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통합 논의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을 공유했다.

결의대회에서는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통합 이후 기대되는 행정·재정·산업적 효과 등이 설명됐다.

참석자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범도민 결의대회 대표’ 일동 명의의 지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통합 추진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통합 추진 절차와 일정, 주민 의견 반영 방식 등을

두고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전남도는 공식 설명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도는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주민공청회 등 추가 소통 창구를 마련해 도민 의견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지난주 청와대에 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며 “대통령이 통합 결단을 높이 평가했고, 대통령에 걸맞은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와 광주·전남의 공동 대응, 시도민의 열망이 맞물린 지금이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행정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공개 토론과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 논의를 구체화하고, 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행정통합 추진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행정통합 명칭… 광주 정체성 희석 우려”

신정훈 행안위원장, 광주시민단체와 간담회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은 13일 전 일빌딩245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추진 배경과 시·도 분리로 인한 행정·재정적 비효율, 지역 간 갈등 문제를 설명하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행정 명칭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측은 통합 논의가 자칫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한 속의 과정과 시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윤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는 “행정통합이 시대적 과제라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과거 시민들을 배제한 채 추진됐던 전남도청 이전이나 광주·전남연구원 분리와 무엇이 다른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원칙적으로는 주민투표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며 “권역별 의견 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명칭을 둘러싼 정서적 반발 가능성도 쟁점이 됐다.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대표는 “특별시나 특별자치도나를 놓고 여러 논의가 있는데 특별시로 갈 경우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질의했다.

신 위원장은 이에 대해 “통합을 추진할 경우 특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구조적으로는 특별자치도처럼 기초와 광역단체의 자치권이 적절히 배분된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특별시보다는 특별자치도가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측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필요성과 기능 분산형 통합 모델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통합 논의 전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우려와 제안을 특별법과 정책 설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산하 기자 goback@

광주, 도시열섬 등 대응 도시숲 10곳 조성

국비 13억 등 총 20억 투입…시민체감형 녹색복지

광주시가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도심 열기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줄여 ‘시원한 푸른 광주’를 만들기 에 나선다.

광주시는 올해 총 사업비 20억6000만원(국비 13억1000만원, 시비 7억5000만원)을 투입해 미세먼지저감숲과 녹색복지숲 등 2개 분야 도시숲 10곳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산림청 등 중앙부처 공모를 통해 도시숲 관련 국비를 확보했다. 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미세먼지저감숲’ 조성 사업으로 3개 사업 9곳에 20억원을 투입하고, 취약계층과 주민 이용 편의를 고려한 ‘녹색복지숲’ 조성 사업으로 1개 사업 1곳에 6600만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저감숲 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동구 필문대로, 서구 풍암동 경관녹지, 남구 효천3로, 남구 유안근린공

원, 광산구 수완동 보행자전용도로 등 5곳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남구 방림초교, 남구 월산초교, 광산구 선운초교 등 3곳 △생활밀착형숲(실의정원) 조성사업 북구 전남대학교 1곳이다. 또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사업은 광산구 보림의 집 1곳이다.

광주시는 도시숲 조성을 통해 도심 내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고, 폭염 때 체감온도를 낮추는 한편 미세먼지 차단, 휴식공간 제공 등 시민 체감형 녹색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위원회’를 열어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성, 규모의 적정성, 권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